

올림픽 경기장 건설 '가속도'

평균 공정률 16%

스피드 스케이팅·컬링
올해 안에 착공 예정

올림픽 분산개최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2018평창겨울올림픽 주요 경기장 건설작업이 당초 공정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등 공사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원도는 강릉지역에 건설되는 4개 빙상 경기장의 현재 평균 공정률이 16%로, 계획 공정률보다 2% 상회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피겨와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은 현재 1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016년 11월 완공 목표로 현재 지하 2층 벽체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조립, 지하 1층 바닥 슬라브 타설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빙상경기장 추진실적(현 공정률 16%, 계획 공정률 14%)

그래픽/홍석범

구분	피겨/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I	아이스하키 II	스피드스케이팅	컬링
4월 현재	14.6%	15.7%	16.4%	토목공사 79%	설계 71%
주요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2층 2,3구간 벽체철근 배근 및 거푸집 조립 지하층 1구간 바닥슬라브 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지중보 철근배근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옹벽 및 지상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목공사 추진 본공사 6월초 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설계도면 및 도서작성 전국체전(10월) 종료 후 착공

남자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리는 강릉하키센터는 15.7%의 공정률로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지중보 철근 배근,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자아이스하키 경기장인 관동하키센터의 공정률은 16.4%로 지하옹벽 및 지상1층 바닥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설계 변경으로 토목공사가 먼저 진행중인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경우 토목공사 공정률이 79%로 오는 5월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본 공사는 6월초 착공될 예정이다.

기존 체육관을 개·보수하는 컬링경기장은 기본설계가 완료됐으며, 현재 실시설계 도면 및 도서를 작성하고 있다. 도는 오는 10월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끝나면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도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각 경기장에서 열리는 테스트 이벤트의 차질없는 개최를 위해 계획된 준공 일자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관계자와 합동으로 매월 공정회의를 열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추

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올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벌여졌던 경기장 재배치 등의 논란이 끝난만큼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지영 올림픽본부장은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동계올림픽 준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기장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며 "선수, 경기 중심의 안전한 경기장 건설을 목표로 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해 올림픽 열기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오인 105in@kado.net

도내 중대형 공사 외지업체 '잔칫상'

77억원 춘천수협 수산물유통센터 외지 낙찰
지역제한 '유명무실'... 최저가입찰 '걸림돌'

강원도내 건설업체들이 유명무실한 '지역제한'과 '최저가입찰'로 인해 이종고를 겪고 있다.

22일 도와 지역건설업체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77억원 규모의 춘천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20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했다.

개찰 결과, 48억3882만원을 써낸 경기도 A업체가 시행사로 선정됐다.

관행적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입찰 결과라는 것이 지역 건설업체들의 반응이다.

이같은 결과는 수협중앙회가 입찰 참가지역을 강원도 이외에 서울과 경

기도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역제한입찰은 강제성은 없지만 업체에서는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부분 강원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시켜 결국 외지업체에 낙찰됐다.

최저가 입찰도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지역 일반건설 업체들은 2018 평창겨울올림픽 유치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경기장과 진입도로 공사 금액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면서 최저입찰제에 유리한 대형 건설사들만 배부르게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는 대형사들과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 수

는 10여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이 도 건설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누적수주금액은 1조 1900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조 3157억원)보다 1257억원(9.5%) 감소했다.

전문건설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도내 일반건설사들의 실적 감소는 전문건설 업체들에게 도미노로 이어져 공사수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말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은 2242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7%(268억 1900만원) 감소했다.

도 건설협회 관계자는 "유명무실한 지역제한과 최저가 입찰로 평창올림픽 효과는 크지 않다"며 "큰 공사로 중요하지만 1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공사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조달청 '중심제' 시범사업 7월까지 나올 듯

건설업계는 물론 지자체 등 일선 수요 기관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 시범사업은 일러야 7월 정도에나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의 추가 시범사업은 카이스트 건축공사 1건 뿐인데다, 아직 계약예규 등 상위법령 개정도 이뤄지지 않은 터라, 내년 전면시행까지는 쉽지 않은 행보가 예상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월말 중심제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곧바로 시스템 구축용역에 착수하는 등 중심제 도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조달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에 나선 4개 공기업 등과 달리 자체 시범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만큼, 협약을 통해

카이스트 건축 등 2건 추진 6월말 세부심사 기준 마련 내년 전면시행까지 촉박

농어촌공사의 '화옹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5공구 목목공사'를 시범사업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단가검토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과정도 남아 있는 관계로 빨라야 7월 정도에나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카이스트의 건축공사 1건을 추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이 역시 발주는 하반기 중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동시에 이들 사업에 적용할 특례기준(중심제 세부심사 기준) 마련에

착수, 업계와 수요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는 심사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필요시 공청회 등도 거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9월이나 10월까지 시범사업 입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용역이 진행 중인 시스템 구축작업도 비슷한 시기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연말까지 약 2~3개월 남짓,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내년 전면시행에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그간의 중심제 진행 경과를 고려했을 때, 준비기간이 다소 촉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시범사업 대상도 많지 않아, 매우 다양한 규모와 공종별 시설사업에 꼭 맞는 심사기준 마련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가격차별 위주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등 상위 법령 개정보다, 세부 심사기준 마련이 먼저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국가기관인 조달청은 정부가 제시한 상위 법령에 따라 현장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순리인데, 그 순서가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정부의 상위 법령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달청이 먼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니, 불과 8개월여 남짓 동안 2건의 시범사업만으로 실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만약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심제 연착륙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bsong@skbong.com

건설경기 풀렸다는데... 전문업계는 '한숨 소리' 커졌다

A사는 최근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의 선금금 10%를 받았지만, 하도급업체(하도급 계약금액 87억원 규모)에는 이를 따로 알리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협력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공사를 진행해오다 최근에야 소식을 들었고, 분통을 터트렸다.

B전문건설사는 C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제입찰로 감액된 계약금액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처단기로 '악명'이 높던 곳이였지만 △△~◇◇ 터널공사 수주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낭패를 봤다. 제입찰만 6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애초 하도급계약 금액보다 6억2000만원이 감액된 채 공사를 계약하게 됐다. B사 관계자는 "일명 '열정페이'(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돈을 받아야 한다는 신조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건설업 체감 경기지표가 지난달 기준 5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전문건설업계의 한숨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 외 추가공사 지시 후 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부터 원사업자가 선금금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의적인 제입찰로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관행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원사업자 상당수가 협력사 선정을 대폭 늘려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분위기여서 업계 간 '출혈경쟁'이라는 어둠도 더해지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최근 신고됐거나 합의 조정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접수된 현황을 보면 2011년 170건에서 2012년 181건, 2013년 269건, 2014년 194건 등으로 최근 2년 동안 크게 늘어났다.

고의적 제입찰로 하도급대금 깎기 관행 여전 가격경쟁력만 앞세워 출혈경쟁 갈수록 심화



주요 사례는 △설계도면 없이 선시공 등 서면 마교부 △계약의 추가공사 지시 후 대금 미지급 △하도급 물량을 거짓으로 제공한 뒤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고의적 제입찰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선금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마교부 등이다.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기간이 촉박하다며 일부 도면을 주고 나서

시공을 요구하고, 애초 계약에 없는 추가 공사를 지시하는 불공정 관행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본사에서 공사금액을 2~3% 감축하라는 지시에 따라 계약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구두계약이 많은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을 교체해 소용라인을 없애기도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원사업자의 가격경쟁력 중심의 협력사 선정 정책도 전문건설업계의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영향을 고려해 신용평가등급 등을 1~2단계 낮춰 문호를 넓혔지만,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협력사를 선정하다 보니 출혈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신뢰'라는 게 있어서 한 현장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 현장에서 보전해주는 방법 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화마저 사라졌다. 마치 소모품처럼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사업자도 수익성 때문에 고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로가 어려울 때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문업계 내부의 출혈경쟁을 방지할 자성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e@day.com